

에너지전환 따른 요금인상 전력수급 불안 '도마 위'

야당 의원, "성급한 탈원전·탈석탄, 국론분열·국민불안만 가중"
백운규 산업부 장관, "요금인상·전력수급 불안 요인 거의 없어"

2017 국정감사

12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논란과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성급한 탈원전·탈석탄 정책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5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무려 232조 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평균 20%(11조원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6·7면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탈 원전·탈 석탄 정책 방향은 분명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면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신규 건설 물량이 백지화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과 석탄이 폐지될 경우 2030년까지 22GW 이상 설비용량이 줄어들어 대양광과 풍력이 이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사진)은 "에너지정책은 일관되는 게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등으로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져 예전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다수회기와

인구밀집도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의 원전 비중은 줄어나가되 국내 원전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근거로 산출했는데 8차 계획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를 수 있고, 현재 전력수요와 공급 추세를 감안하면 최소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신재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다 원자력과 석탄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이후에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많은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산업부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산업부는 탈 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호보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키려 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의 훈령으로 적법하게 출범한 만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제31차 아·태지역 전기공사협회연합회(FAPECA) 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파페카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된 노력, 탄소 배출없는 깨끗한 미래를 꿈꾸다'

제31차 FAPEC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개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가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FAPECA: 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임피아나 호텔(Impiana klcc hotel)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

▶ 관련기사 6·7면

올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류재선 회장을 필두로 이형주 분지 사장, 허현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협회 임원,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중앙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대표단을 꾸려 회의에 참가했다.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들도 연사로 동행했다.

'탄소중립 대책(Carbon Neutral Opportunitie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FAPECA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이슈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작금의 에너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FAPECA 회원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 관심과 지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산업 부문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아흐마드 타주딘 알리(Tan Sri Dr. Ir. Ahmad

Tajuddin Ali) 건설산업개발청(CIDB: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청장은 지난해까지 산업분야에서의 탄소배출을 부문별로 최대 20%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아흐마드 타주딘 알리 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선 세계 각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우리나라는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력망-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를 테마로 우리나라 전력 현황과 스마트그리드, 동북아 수퍼그리드 등 미래 기술 준비 동향 등 전력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어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 기조와 국가·산업별 전략 등을 소개했다.

한편 FAPECA는 지난 1986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제안으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대만, 하와이, 뉴질랜드, 호주 등 6개 나라와 동남아시아 전기공사협회 연합(AFEEC) 5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전기공사협회가 정회원으로, 일본 국 광시설공업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정훈 기자 joh@

반면 LNG를 적도입하고 있거나 일부 전력수급계약(PPA)이 남아 있는 SK E&S와 GS E&S, GS파워는 매년 흑자 규모가 크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처럼 민간 LNG발전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기저발전 설비 증가와 LNG연료비 하락에 따른 SMP 하락이 커서 전력시장에서 보전 받는 수익보다 연료비와 고정비 등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간 LNG발전사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LNG복합 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용량가격 정상화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 ▲신재생의 무할당(RPS)제도 산정 기준 합리화 ▲LNG 세금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가스 적도입 제도 개선 ▲발전기 가동비용, 계통운영 보조 서비스 정산비용의 합리화 ▲가스 약정 물량 부가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형석 기자

2017 ????-??? 5?

?????? ???? 12?

"LNG복합 가동률만 높여서는 에너지전환 어려워"

LNG발전사 들릴수록 적자 구조...전력시장 제도 개선 시급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복합 노후석탄발전기 가동 정지와 LNG복합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LNG발전사들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기사 4면

민간 LNG발전사들에 따르면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연료비도 보전 안 되는 정산구조여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LNG복합의 가동률만 높이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NG적도입이나 전력수급계약(PPA) 등의 수익보전 방안이 없는 일반 복합발전사들은 수년째 누적적자가 발생해 발전소 존폐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NG 복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동두천드림파워와 포천파워, 평택에너지, 에스파워, 대륜발전 등은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동두천드림파워와 대륜발전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신 설비를 적용해 2015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2015년 130억원, 2016년 435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2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약 500억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나머지 회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KOSDAQ www.sjem.co.kr
코스닥상장법인

기술, 환경 그리고 미래 이것이 서전의 생각입니다.

서전기전의 생각!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전기전의 꿈, 희망, 미래 또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서전기전의 또 다른 생각입니다.

친환경
축소형배전반

Think Smart | Think Green | Think Compact | Think Safety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67번길 38-19 (주)서전기전
(대월면 초지리 733-7 대월일만산업단지 내)
전화: 031-426-5506(대) 팩스: 031-631-2633

· 인양사무소
광주도 영암시 동안구 영암로 37 9층 (송계동, 금명빌딩)
전화: 031-326-5506(대) 팩스: 031-426-5509 E-mail: sde@sjem.co.kr

·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운천로 53 대영오비스텔 1210호 (충명동)
전화: 042-823-6533(대) 팩스: 042-823-6533 E-mail: sde@sjem.co.kr

기술, 환경 그리고 미래

SJ 서전기전
고객지원센터 : 031) 8010-2526